

목차 & 두 줄 요약



모빌리티 11



해외

‘DSK 2025’ 드론쇼코리아, 벡스코서 역대 최대 규모 개최 11

‘드론쇼코리아 2025’는 2월 27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며, 290여 개 기업이 참가해 드론 관련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공유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융합된 전시와 컨퍼런스를 선보일 예정

해발 5천 미터 고원 누비는 자율주행 트럭...中, 스마트 광산 향한다 12

중국 서부광업회사와 화웨이는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스마트 광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무인 운송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안전성의 개선과 연간 600만 위안의 운영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음.

주차난 해결 ‘발렛 로봇’ 뜨는데...한국, 10조 시장 놓치나 13

로봇주차 기술이 주차난 해소와 공간 활용도를 높이면서 로봇주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로봇주차 시장에 도전하고 있으나 기존 규제 장벽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책

친환경차·이차전지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14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차 및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급 확대, 기술력 강화,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의 방안을 발표하는 등 성장 둔화와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할 계획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15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시행하고 배터리 성능 평가와 재사용 배터리 활용 등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일상 속으로 자율주행차가 달려갑니다 16

서울시는 심야·새벽 시간대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남 하동 등에서는 농촌형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해 교통 편의를 개선하는 등 전국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실증과 대중교통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기업

BYD, 의구심 깨고 순조로운 출발... 한국시장 스며들수 있을까 17

BYD코리아는 소형 전기 SUV 아토3를 출시해 1주일 만에 1,000대 사전 계약을 기록하는 등 저렴한 가격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 문제가 제기되며 소비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음



PM

전동킥보드에 ‘필기 면허’ 도입...업계 “아무도 안 딸 것” 아우성 18

경찰청은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감소 등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를 위해 PM 전용 면허를 신설하고 필기시험을 의무화할 예정이나, 업계는 면허 취득 어려움과 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온라인 시험 도입 등 유연한 제도 운영을 요구하고 있음



UAM

“드론 띄워 공중서 이동통신 서비스”...공중~지상 10km서 영상 전송 19

ETRI는 공중-지상 간 대용량 장거리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 재난 지역과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도 신속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기술은 UAM을 활용한 긴급 구조, 원격 진료, 조난자 수색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임





‘DSK 2025’ 드론쇼코리아, 벡스코서 역대 최대 규모 개최

-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 ‘드론쇼코리아 2025’가 10주년을 맞아 ‘DSK 2025’라는 새 이름을 내걸고 2025년 2월 27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

<DSK 2025 포스터>



- 이번 행사는 15개국 29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총 1120개 이상의 부스를 운영하고 10주년을 맞아 산업·기술·법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와 체험 행사도 함께 운영될 계획
- 또한, AI, 뉴스페이스, 미래모빌리티, Net Zero*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융합된 전시회로 확장될 예정
- * 탄소중립이라고도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흡수량 증대를 통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 전시장에는 ▲국방·방산존 ▲우주항공 공동관 ▲대드론관 ▲재난안전 드론공동관 ▲공간정보 공동관 ▲지자체관 등 6개의 공동관이 마련
 - 우주항공 공동관에서는 우주항공청 주도로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대학이 연계된 ‘우주항공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관련 기술 전시가 진행
 - 대드론관에는 담스테크, 스마트레이더시스템 등 기업이 참여해 최대 15km 범위로 전파 차단이 가능한 ‘드론헌터’ 시리즈와 EMP 방호 대피소와 같은 솔루션을 소개
 - 재난안전 드론공동관에서는 소방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재난안전 관련 기관들도 참가하여 드론을 활용한 구조·재난 대응 기술을 시연할 계획
 - 공간정보 공동관에는 공간정보 품질관리원을 필두로 웨이즈원, 아이지아이에스, 시스테크, 올포랜드 등이 참여하며, 지자체관에는 경남TP, 부산TP, 상주시, 성남시, 제주도, 포천시 등이 참여
- 행사 기간 ▲국가 안보와 드론의 역할, ▲해외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드론 상용화 및 기술 표준화, ▲AI 기반 드론 운영 등의 주제로 한 글로벌 컨퍼런스를 통해 최신 기술·산업 트렌드와 법 제도·정책, 공급망 등 다양한 주제를 공유할 예정

출처 :디지털조선일보(2025.02.06.) ‘DSK 2025’ 드론쇼코리아, 벡스코서 역대 최대 규모 개최



해발 5천 미터 고원 누비는 자율주행 트럭...中, 스마트 광산 향한다

- 중국 서부광업회사, 중국철로 19국그룹, 화웨이가 협력하여 세계 최초로 무인 운송 시스템을 도입,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스마트 광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
 - 2023년 9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해발 5000m의 위룽 구리 광산에서 무인 운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 프로젝트 팀은 2025년 1분기까지 자율주행 차량에 기반한 작업이 상시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구리광산에서 작업 중인 스마트 채굴·운송 기기>



- 자율주행 트럭은 24시간 완전 자동화 작업이 가능해 기존 유인 차량 대비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광산 작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음
 - 무인 트럭은 최소 20m 너비, 최대 8% 경사의 험준한 광산 도로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고장률을 기존 유인 차량 대비 5% 이하로 낮추고 온라인 작동률을 99% 이상으로 유지하여 운영 안정성을 확보
 - 또한, 라이다, 카메라, 밀리미터파 레이더 등 다중 센서를 활용해 여름철 먼지와 겨울철 눈으로 인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동적 장애물 감지, 정적 장애물 식별, 위치설정 등의 기능을 통해 야간에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음
- 서부광업회사에 따르면 이들은 스마트 광산 도입으로 연간 600만 위안(약 11억 원)의 운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기술 도입이 진행될 예정

출처 : 중앙일보(2025.01.23.) 해발 5천 미터 고원 누비는 자율주행 트럭...中, 스마트 광산 향해 '착착'





주차난 해결 ‘발렛 로봇’ 뜨는데…한국, 10조 시장 놓치나

- 전 세계적으로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로봇주차 기술이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받으며 기존 주차 시스템 대비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개선하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음
 - 로봇주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지정된 구역에 두면 로봇이 이를 이동시켜 최적의 주차 공간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기존 자주식·기계식 주차장 대비 좁은 공간에서도 더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으며 건물 층고를 낮춰 공사비 절감과 추가 임대 공간 확보가 가능
 - 미국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주차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67억 달러(약 9조 7,4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악명높은 교통체증 도시인 태국 방콕은 로봇주차 도입을 통해 주차난을 해결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한국 스타트업 쎬퍼엠의 ‘엠펜시스템(MPSystem)’ 기술이 활용됨
 - 엠펜시스템은 시가 차량 출입 시간과 주차 공간을 최적화하여 차량을 배치하고 로봇이 차량을 들어올려 수직·수평 이동을 통해 주차를 수행해주는 시스템으로, 주차장의 굴착 깊이를 줄여 공사비 절감 효과를 제공하며 차량 입출차 시간이 2분 30초 정도로 단축되어 효율성을 향상시킴
 - 방콕 ‘위즈덤101’ 쇼핑센터와 ‘하이드 수쿰빗’ 주거시설에 적용되어 각각 690대, 198대 규모로 운영 중
- 한국 기업들이 로봇주차 시장에 도전하고 있지만 로봇주차는 기계식 주차로 분류되어 기존 기계식 주차장 안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어 규제 장벽으로 인해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
 - HL만도는 KT 판교 신사옥에서 ‘파키’(PARKY) 로봇주차 시스템 실증 사업을 진행했으며, 휴맥스 모빌리티는 현대위아와 협력하여 서울 성수동에서 기술 검증을 실시

<HL만도의 주차로봇 ‘파키’가 실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



- 기업들은 로봇이 차량을 옮기는 것이 현행법상 재산상 피해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 확장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기술에 맞는 별도 기준이 마련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출처 : 머니투데이(2025.02.07.) 주차난 해결 ‘발렛 로봇’ 뜨는데…한국, 10 조 시장 놓치나





친환경차·이차전지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 친환경차·이차전지 산업은 국내 제조업 고용의 13.4%(40만 명), 제조업 생산의 15.9%(329조 원)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나 최근 성장 둔화 및 불확실성이 증가
 - 최근 3년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65%, 배터리 73% 성장했으나 국내 전기차 시장은 최근 전기차 캐즘과 화재 불안심리 등으로 2년 연속 역성장하는 등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로 위기 대응 필요성이 커짐
- 이에 산업통산자원부는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포함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
-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확충
 -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통해 가격할인에 비례한 추가 지원 및 청년 첫차 구매 시 20% 추가 지원
 - 전기차 급속충전기 4,400기 추가 설치(2025년), 충전소 이용시간·요금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고, 배터리 무상 점검, 이상징후 알람 확대, 첨단 화재 진압장비 확충 등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이행
 - 수소버스 정비센터 권역별 확충, 수소충전소 확대(56개 → '27년 119개), 수소연료 보조금 상향,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조치 연장 등 추진
- (첨단 기술력 강화) 첨단 기술 경쟁력 확보 및 미래 모빌리티 강화
 - 자율주행·배터리·공급망 등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25), 자동차 제어 기능을 통합한 SDV*용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 개발('26),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 로드맵 마련('27)
 - * Software Defined Vehicle : 소프트웨어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자동차로, 주행성능, 편의기능, 안전시양 등을 지속 업데이트할 수 있음
 - 고안전·고성능·초경량 등 차세대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4,330억 원을 투입
-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강화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
 - 이차전지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배터리 기업 투자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 30% 확대 및 이차전지 핵심광물 관련 기술 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 적용
- (대외 불확실성 대응)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 미국 신정부 출범과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태국과 FTA 협상 추진, 해외 전기차 시장 개척, 글로벌 완성차와 국내 부품기업 매칭 등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출처 : 산업통산자원부 보도참고자료(2025.01.15.) 친환경차·이차전지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시행하며 전기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기존에는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인증하는 자기인증 방식이었으나 개정된 「자동차관리법」(2025년 2월 시행)에 따라 정부가 직접 배터리 안전성을 시험·인증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배터리를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 국토부가 지정한 성능시험 기관을 통해 열충격, 과열방지, 단락, 충격, 침수 등 12개 항목의 안전성 시험을 거친 후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
 -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 인증함으로써 전기차 화재와 같은 안전 사고 위험을 줄이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리스크를 업계와 공동 부담하는 체계를 구축
-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통해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주기 이력을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됨
 -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배터리 제작 시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하여 차량 운행 중 배터리의 정비 및 검사 이력을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의 식별번호를 변경 등록해야 하며 리콜 발생 시 자동차 결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배터리 변경 내역을 추적 관리
 -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며 배터리 성능 평가와 재사용 배터리 활용 등 향후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토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안전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을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 보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임
 - 배터리의 전주기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 및 친환경적인 폐기 절차 마련 등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확립할 계획
 - 국토부는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전기차 관련 추가 규제 개선도 검토할 예정





일상 속으로 자율주행차가 달려갑니다

- 국토교통부는 2025년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 세종, 경기 판교·안양, 충남 천안, 경북 경주, 경남 하동, 제주 등 7개 지역에 총 26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자율주행 기술 실증과 대중교통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이번 지원은 '자율차 시범운영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 자율주행 서비스는 농촌 지역의 대중교통 개선, 심야·새벽 대중교통 보완, 산업단지 근로자 이동 지원, 광역 자율주행버스 운영 등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구성됨
- 서울시는 심야·새벽 시간대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강남권 택시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난이도 높은 실증을 진행할 계획
 - 기존 심야 자율주행 서비스 운행 구역을 역삼·대치·도곡·삼성에서 논현·신사·압구정·청담까지 확대하고 차량 대수를 3대에서 7대로 늘릴 예정이며, 새벽 출근자를 위한 첫 차 자율주행버스 운행노선을 추가하고 기존 1대에서 4대로 증차

<서울시 새벽 첫 차 자율주행버스>



<경남 하동군 농촌형 자율주행버스>



- 경남 하동은 고령층이 많은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짐칸을 갖춘 농촌형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하여 병원·시장·복지회관 이동 편의를 개선함
- 그 외 경기도, 경주시, 제주도 등에서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운영
 - 경기도는 판교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 이동편의를 위한 노선버스, 안양은 주간 및 심야 노선버스, 세종시는 광역 자율주행버스와 주거단지를 연계하는 자율주행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운영
 -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에서 회의장~숙소 간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하고 제주도는 서귀포~제주를 연결하는 자율주행 노선버스를 운영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02.18.) 일상 속으로 자율주행차가 달려갑니다





BYD, 의구심 깨고 순조로운 출발... 한국시장 스며들수 있을까

- BYD코리아는 지난 16일 공개한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BYD 아토3의 사전 계약 건수가 1주일 만인 23일 1000대를 넘어섰다고 24일 밝힘
 - BYD는 승용 사업 부문을 시작하며 아토3의 기본 트림을 3,150만 원으로 내놓아 보조금 적용 시 2,000만 원대로 구입할 수 있는 전기차를 선보임
 - 이는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3,000만 원 중반대보다 낮으며 유럽(4만 유로, 약 5,800만 원)과 일본(440만 엔, 약 4,100만 원) 등과 비교해도 매우 저렴한 수준
- BYD 측은 “당장의 판매량보다 안전성·편의성·성능 등 모든 면에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함
 - BYD는 전국 6개 권역별로 딜러사를 선정해 전국 15개 전시장과 11개 서비스센터에서 소비자를 대면하며 차량의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AS를 지원
 - 이는 소비자와의 접점을 최대한 늘리고 활발히 소통해 서서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자 하는 전략으로 읽힘

<BYD의 첫 국내 출시 모델은 소형 전기 SUV 아토3>



- 그러나 이전에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드러난 아토3의 각종 품질 문제가 대두되며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음
 - 공조기 작동 시 송풍구를 통해 흰색 가루가 나오는 이슈가 다발적으로 발생한 바 있으며, 불과 3년 전에 출시된 차량이지만 벌써 펜더, 범퍼 등 차체 전면부 주요 부품과 휠 베이스, 도어 부분에 부식이 발생한 사례도 존재
 - 또한, 운행을 마치고 전원을 껐을 때 라디오가 저절로 켜지거나, 애플 카플레이로 지도 앱 사용 시 경로 음성 안내가 제공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계통의 오류도 몇 가지 나타남

출처 : 세계일보(2025.01.24.) BYD, 의구심 깨고 순조로운 출발... 한국시장 스며들수 있을까
경기신문(2025.01.23.) 한국 상륙한 'BYD'...해외에선 결함 덩어리? 품질 문제로 '들쭉'





전동킥보드에 ‘필기 면허’ 도입...업계 “아무도 안 딸 것” 아우성

- 그간 원동기 면허를 요구하는 방식이 전동킥보드 운행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경찰청은 PM 전용 면허를 신설하며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면허 취득 방침을 확정
 - 면허 취득 방식은 필기시험만 치르는 방식과 필기+실기 시험을 함께 치르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고, 면허 취득 연령은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기준과 동일한 만 16세로 결정
- 면허 제도가 신설될 경우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PM 교통사고의 예방 효과도 기대됨
 -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PM 교통사고 2,389건 중 1,148건이 무면허 사고였으며 이 중 907건이 미성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였음

<PM 전용 면허 개요 및 PM 사고건수 추이>



- 시민 1,0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70% 이상이 전동킥보드 면허 도입에 찬성했으며 절반 이상이 본인 또는 자녀의 취득 의사를 밝힘
 - 경찰청은 면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검토했으며 대다수 시민들이 안전 강화를 위해 면허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
 -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미성년자들이 필기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면허 취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온라인 시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 전문가들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지만 헬멧 미착용 벌금, 견인 제도 등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면허 의무화까지 추가되면 산업이 위축될 수 있어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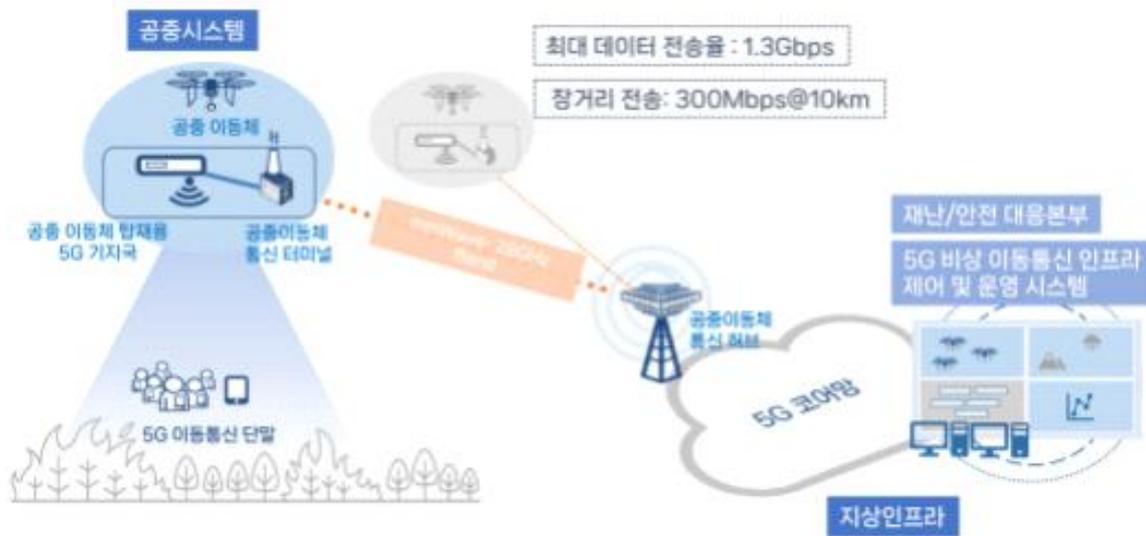
출처 : 서울경제(2025.02.09.) 전동킥보드에 ‘필기 면허’ 도입...업계 “아무도 안 딸 것” 아우성



“드론 띄워 공중서 이동통신 서비스”...공중~지상 10km서 영상 전송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공중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지상 간 대용량 장거리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여 충남 태안에서 성공적으로 시연
 - 그간 공중이동체와 지상 간 무선통신 기술은 5km 이내에서 전송 속도가 40Mbps급에 머물러 있었고 20km에서는 수십 kbps급 전송 속도에 그쳐 장거리에서 대용량 통신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연구팀은 공중이동체와 지상 간 2.5km 거리에서 1.3Gbps 속도로 데이터 전송에 성공했으며, 10km 거리에서도 300Mbps 속도로 통신을 구현했다고 밝힘
- 해당 기술을 이용할 경우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을 활용해 재난 지역 및 통신망이 부족한 오지에서도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음
 - 화재나 전쟁 등 재난으로 인해 이동통신 인프라가 붕괴됐거나 부족한 지역에서 공중에 임시로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 발생 시 공중 시스템을 통해 긴급 구조 및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과 원격진료·조난자 수색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음

<ETRI가 개발한 공중이동체 기반 대용량 이동형 이동통신 인프라 기술 개념도>



- ETRI 측은 “재난 재해뿐만 아니라 해상, 산악 등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조난, 실종자 수색, 응급환자의 원격진료, 긴급치안, 경호, 경찰 등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 국민 안전과 편의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함

출처 : 디지털타임스(2025.02.06.) “드론 띄워 공중서 이동통신 서비스”...공중~지상 10km서 영상 전송

